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5호

2009년 5월 27일
 발행인 양규현
 02 3667 2855
 http://spt.jinbo.net
 spt2008@jinbo.net

차례

- 2 한국경제, '경기 바닥론'의 진실
경제의 몸살은 왔는가? - 경제회복의 착시효과
- 3 "끝까지 투쟁한 조원들 반드시 지켜내야"
- 4 MB시대, '상습시위꾼'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MB 때문에 고생이 많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3,000쪽, 국가폭력 그리고 은폐된 진실
- 5 신지호가 낸 집시법 벌써 개정된 거?
- 6 "억울한 종태의 영전에 승리의 깃발을"
해고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위한 경기실업대회
- 7 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많은 '사회연대노동론'
인간이 부른 재앙, 전염병
- 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보여준 한국정치



5월 22일 쌍용차 촛불문화제. 상상해보라, 아이들 얼굴에 묻은 웃음이 벗겨지는...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정리하고 분쇄’ 파업참가단을 조직합시다

살기 위해 공장에 모였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2천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646명에 달하는 대량해고를 결정한 경영진, 정리해고를 전제로 '회생'을 결정한 정부와 채권단, 쌍용차 경영파탄을 노동자가 짊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희망퇴직을 하면 분사한 곳에 재입사시켜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고 파업에 참가하면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된다'며 파업대오를 파괴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70미터 굴곡에 올랐다

자본가들은 낯짝도 두껍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모였습니다. "죽도록 일만했는데 정부는 공장을 해외투기 자본에 팔아먹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니 이번에는 노동자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니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항변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가 나쁘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항상 이익을 보는 놈만 이익을 본다. 그 놈은 바로 자본가다!"



5월 22일 파업선언 결의대회

국가가 책임지세요

이 나라 경제를 주무른다는 관료님들! 신자유주의는 대세라며 자본시장 개방하고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해외투자'라며 좋아했지요.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노동운동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패러다임'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쌍용차 혈값에 해외자본에 넘기로 기술유출당하고 돈까지 빼내가는 데도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도 않습니다.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부실채권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주더군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쌍용차를 망쳤습니까? 국가가 책임지세요.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800조원이 투기를 못해서 떠돌아다닌다면서요!



5월 22일 파업선언 결의대회

파업참가단을 조직합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항공기, 경제파탄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싸움입니다. 자본과 국가가 책임지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덤탱이를 쓰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자본과 정권의 '고통전가' 공격이 전체 노동자를 향해 쓰나미처럼 몰려 올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체노동자는 전망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공장을 점거하고 자본과 정부의 모든 공격의 화살을 막아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전체노동자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절규, 그들의 결의를 함께 해봅시다. 5월말부터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을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격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된다고 할 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조직합시다. '정리하고 분쇄 쌍용차 파업참가단'을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하면서 6월에 노동자는 파업으로, 민중들은 거리시위로 노동자민중의 총결기를 함께 준비합시다.



현장조직 의장단 식발식 단행

MB 때문에 고생이 많다!!

경찰에 박카스병 던진 지적장애인 구속
5월 2일 명동 마구잡이 연행을 피하던 지적장애인 지모씨가 자리를 피하다 경찰에 박카스병을 던졌다. 박카스병은 경찰방패에 맞고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지씨는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지씨는 (지적장애2급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가서 물풍선을 터뜨리고 노는 것이나 박카스병을 던지는 것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안산노동인권센터 이승택)

"명박 때문에....." 외치다 폭심

5월 10일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가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당사 앞을 지키던 경찰들에게 "명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동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윤모 교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기자회견만 해도 연행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식을 진행하던 대학생 49명 연행.
5월 4일 경찰청 앞에서 '촛불 1달' 집회의 강제연행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 6명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연행.
5월 14일 용산참사범대위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촉구 검찰청 앞 집회 무산되자 긴급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후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 포함 참가자 7명 연행.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재임 시에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품으로 규정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는 고사하고 대체입법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8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된 노동자 민주 투쟁과 10년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이 있었음에도 끝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다시금 탄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 사

상과 이데올로기를 유포, 각인시키는 실질적, 상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반공/반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권을 정점으로 한 한국사회 보수세력은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며,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자 민주 운동이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어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입법조차 거부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지

향과 투쟁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사실상 초법적인 형태의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공안탄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그 연속 위에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안정국'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법 중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공안탄압분쇄/민주주의회 쟁취'만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독자의 투쟁대오가 필요하다.

고민택

신지호가 낸 집시법 벌써 개정된 거??

현행 집시법도 워낙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고생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이 경쟁하듯 집시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어 더 많은 고생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촛불은 분노와 증오의 광기 민주주의'라는 망언을 하며 촛불 소방관을 자처한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마스크법'이 있다.

이 법안은 사실 집회 금지나 다름없는 법안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주요한 내용은 집회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 현장 채증을 명문화하며, 집시법 위반 벌금을 최대 10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지만, 원천적인 불법폭력집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

고 보호하기는커녕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사고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불법과 폭력을 조장한다는 진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등 착용금지와 경찰의 채증 보장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다. 벌금을 높이는 것은 현행법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처벌을 무기로 막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도 맘만 먹으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정은 현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사전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혀주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자들의 초상권 및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집시법 개악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집회현장은 신지호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이 적용 중인 것 같다.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는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화물연대는 집회신고조차 받고 있지 않다. 집회현장에 가면 경찰이 대놓고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연행하겠다고 협박한다. 기자회견을 해도 채증을 하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 되고 연행을 한다. 경찰청장은 이제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안재훈



MB시대, '상습 시위꾼'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는 '불허'와 '무산', '진압'과 '처벌'이라는 공격적인 방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까지 나서서 지난 촛불 1주년 집회와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들어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고, 도심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41명, 5월 16일 457명이라는 비극적인 대규모 연행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막가파식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은 '상습시위꾼'으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밝혔

던 단체들에게는 불법파파폭력단체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는 아예 신고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때려잡는 도구로만 작동할 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형식적 수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파쇼 시대가 부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발악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노동자민중이 집단적인 투쟁과 상상력을 통해 권력을 찾아 와야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3,000쪽, 국가폭력 그리고 은폐된 진실

재개발,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폭력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투자한다. 전두환시절 그 유명한 빨간바지 이순자부터 지금 이명박시절 박미석 사회복지정책수석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사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산 농토를 형질변경해서 집을 지어 이득을 보든, 개발/재개발지역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거나 개발될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개발을 시키면 되기에 우리 보통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듯 욕망과 이윤이 점철된 투기는 농민을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민과 상인의 삶의 밑천을 훔쳐내는 강탈적 축적과

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주변 비공식부문으로 내몰아내는 계급, 계층분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계급계층 분화과정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노동유연화와 연동되어 있으며 동시에 공간이전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몰리고 이는 수도권 전철 확대구간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계급계층분화는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용역과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가능케 하는 법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서울에서만 550여 군데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철거민운동은 재수없이 당하는 철거민의 아우성일 뿐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거주자의 요구는 배제된 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가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용산의 철거민도 폭력을 피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다.

3천쪽, 강부자를 위한 국가폭력의 은폐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86년 건대사건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27명의 검사가 동원되어 수사를 했고, 망루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은 경찰 1명을 죽이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결론은 예정되어 있었다.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가축의 동의도 없이 실시된 전례없는 부검조차도 예정된 결론에 어긋나는 증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유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진압과 함께 따라 들어간 채증반의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의 기초가 되는 1만쪽 정도의 수사자료 중 3천쪽 정도의 분량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는 수사자료 3천쪽을 내놓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검사는 거부를 하고, 재판부는 단지 검사측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불이익을 줄래도 검사측에 유리한 자료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에 발린 협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있어도 3천 쪽이 나오

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정된 결과를 향한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PD수첩(5월 19일 방송분)에서 방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4백 쪽에는 시녀와 같은 위협물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진입한 특공대와 충돌한 소방대원의 진술,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구도 없이 그리고 필요한 300톤 크레인을 못 구해 100톤 크레인으 로 강행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화지점에 대한 특공대원의 어긋난 진술들이 나중에 입을 맞춘 진술로 변해 있었다. 주로 김석기를 비롯한 경찰 지휘부, 특공대장을 비롯하여 현장에 진입한 특공대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용역들에 대한 조사가 담겨있는 3천 쪽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이 해명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성 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경찰총합학교 교장 박종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3천 쪽의 내용은 명확해 보인다. 결국 검찰의 수사자료 3천쪽 공개거부는 용산참사로 표현되는 자본의 강탈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폭력이자, 빨간바지 그리고 강부자체제의 구조적 폭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발악일 뿐이다.

이중회 (용산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5. 14 대검찰청 앞 집회는 가로막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억울한 종태의 영전에 승리의 깃발을”

30원이 가까이 택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올해 투쟁을 기념하는 투쟁이 될 지 짐작하지 못했다.

돈으로서의 가치조차 희미했던 30원 때문에 노동자 한 명이 죽음을 택할 줄은, 또 그 죽음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전으로 모이게 하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 총파업을 준비하게 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다.

화물연대 노조 광주지부 박종태 제 1차 회장은 지난 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속, 아카시아 나무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 38세. 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동지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려고, 대한통운 내 까짓 게 얼마나 버티나 보려고 그 자리를 택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3월 16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제1지회 소속인 대한통운택배분회 화물연대노동자 78명을 정리하고 했다. 노조는, 박종태 지회장은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의 노조활동 인정과 수수료 30원 인상,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대한통운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내가 박종태고 당신이 박종태다”

고백컨대, 나는 그리고 내 곁의 노동자들은 지난 3일 까지 그들의 투쟁에 관심이 없었다. 4월 말 대전 대한통운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던 노동자의 발이 도로를 밟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참 너무하네. 노동절 끝나면 한번 가봐야지 었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들러온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 대전에서 나는 “종태야,

그토록 기다리던 동지들이 왔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네가 웃으면서 좋아할텐데”라고 오열하는 택배노동자들과 마주쳤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은 “내가 박종태고 당신이 박종태다”라며 “종태가 우리 보고 빨리 투쟁하라고 동지들을 보내주었다”고 이를 막물었다.

그날 이후 고인을 중심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외침이 대전과 전국으로 만드레 흩날리며 퍼져나갔다. 정부와 경찰 역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서고 어떻게든지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군홧발로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결국 사이렌 소리와 군홧발에 짓밟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16일 밤 대전, 고인과 함께 투쟁하고자 했던 노동자민중대회 참가자 486명이 연행됐다. 대전지법은 개인 이레 단일 사안으로 최대 인원인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펼쳤고, 곧이어 경찰이 대전에서 최초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현재까지도 경찰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들었던 만장용 대나무를 ‘축창’이라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고, 언론은 택배노동자들을 폭도라 지칭하며 누구든 빨리 구속하라고 악을 쓰고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던 금호 아시아나와 정부,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 경찰과 언론을 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투쟁은 택배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닌 건설과 각 지역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외쳐질 것이다. “억울한 종태의 영전에 승리의 깃발을” **민동희**

해고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위한 경기실업자대회

지난 5월15일 안산역 앞에서 경기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열렸다. 급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실업자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09 실업자 대행진 을 준비했다. 안산은 3,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반월공단의 노동자와 8,700여개의 업체가 있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살아가는 곳이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서 지금은 취업해 있으나 실업이 걱정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할권리, 일하지 못해도 살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당일 집회는 급속노조 경기지부의 발원으로 시작됐고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안산시에 보내는 6대 요구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어 230여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훌쩍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5일장이 열린 라성에서 대오는 잠시 멈춰 서서 시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우리를 어떻게 궁지로 내몰고 있는지 절절하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주장했다. ‘범에 엄매이지 말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며 행진을 계속했다.

화랑유원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선전게시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퇴근문화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진은 끝났다.

이번 경기지역에서 열린 실업자대행진은 공황시기 실업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투쟁을 시작한 첫 사례이다. 대행진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대회가 이벤트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안산지역 주력 선전전을 하고, 대학과 학생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업자대회로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업운동과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장이기도 했다. **권미정**



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닮은 ‘사회연대노총론’, 실현가능성도 글썽?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혁신 선언, 사회연대노총론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방향을 제출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걸음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노총론은 언뜻 보면 올바른 내용을 담은 듯하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으로 시나가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연대노총론, “정규직=귀족 노동자”론의 노동자 버전

사회연대노총론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통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나아가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 조합원/미조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을 포함해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집회만 해도 탄압받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 안정성과 고임금(?)이 근거라면? 그러나 이 알방한 상대적 안정성조차 현 공황 국면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연대노총론의 이런 주장은 “정규직=귀족 노동자”라는 정권의 주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회연대의 실체, “정규직 밥 몇 술 더는 것”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이 밥 몇 술 더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고 한다. 또 기업의 직접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즉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는’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이 정규/비정규연대의 핵심이고, 양보교섭이나 임금 인상 자체가 사회임금(=사회복지책)을 확보받았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정규/비정규라는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해 비정규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나 임금인상 투쟁 자체를 통해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며 총력을 다 해 싸워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러나 정부와 자본도 한 발 양보하세요’라는 구

걸이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할 사회연대노총론

이미 2007년 좌초된 사회연대전략의 확대개정판인 사회연대노총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은 (민주노총이 강조하는)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인 용산철거민 확산투쟁,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투쟁을 자신의 투쟁과제로 받아안아 이 투쟁들을 반자본/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체노동자의 대표체로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선도체로서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로 접근하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장혜경

인간이 부른 재앙, 전염병

내가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십여 년 전의 일이다.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의 수업 시간에 **역학¹⁾**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전염병의 시대는 끝나고 만성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전염병이 전공이셨던 교수님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효과적인 백신과 항생제들이 개발되면서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전염병은 치료가 가능한 약한 질병이 되었고 이제는 암과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만성병이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시기라고 했다. 보건학에서 역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감염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그렇게 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전염병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뉴스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작년 촛불 투쟁의 시작은 또 하나의 전염병인 광우병이었다. 다시, 전염병의 시대로 돌아온 것일까?

최근 유행했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다. 먹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동물의 자연적인 일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이 쪼여진다는 것에 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키우고 한 마리라도 더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투입한다.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운명인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몸에서 적합한 유전자를 찾아 이식하고 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세계화된 지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상품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고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약값이 없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인간이 죽어간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간이 차단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자본이 제 배만을 불리 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의 대 유행이 멀지 않다고도 한다.

이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다.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먹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결합하며 인류는 재앙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해미

주 1) **역학**, 질병의 발생 · 유행 · 종식에 미치는 자연적 · 사회적 모든 조건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예방이나 제압의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의학의 한 분과. 2)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으로 흔히 광우병이라고 불리며, 인간 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준 한국정치 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책을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옳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멸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



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

MB정권과 자본가들을 향해 노동자민중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공황기 MB정부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 투쟁이 전국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MB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맞선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집시법 개악,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5월 말 다시 한 번 공세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6월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준비해나갑시다!!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5월 29일 (금) 18시 30분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주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 ·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

5월 30일 (토)
 장소: 서울시내 (시간장소 추후공지)
 주최: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 ·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